**9월 28일 토론 스크립트**

천해성 차관: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천해성입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남북관계 발전과 남남갈등 해서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이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두차례의 토론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보수정부 진보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두 분의 전직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을 모시고 비슷한 내용의 주제입니다만 남북관계발전 남남갈등 해소에 대한 견해들을 오늘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를 그리기보다는 옆에 우리 정병국 의원님부터 해서 간략하게 소개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두번의 토론에 이어서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주관하셨던 전직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원장님을 모시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오늘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통일 평화연구원의 정병국입니다.

김연철 장관: 예 저는 김연철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남남갈등해소와 국민적합의라는 것은 대북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용표 장관: 예 저는 홍영표 전직 통일부 장관입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학생들과 남남갈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함으로서 갈등해소에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연 원장: 안녕하세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김병연입니다. 현재 경제학부 교수로 있고요 오늘은 제가 원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초청받아서 게스트로 왔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주제를 전직 두 장관님 정병국 의원님 천해성 차관님 김범수 교수님 함께 한다니 참 기쁘고 아주 보람찬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자유전공학부에서도 교수로 재직 중이구요, 오늘 이렇게 두분 전직 장관님과 차관님 그리고 정병국 의원님 원장님을 모시고 남남 갈등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자리가 남남갈등 해소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천해성 차관

예 감사합니다 방금 다 인사를 해주셨구요.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 네분 특히 전 통일부 장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부에서 근무하면서 통일정책실장이나 또는 통일부 차관으로 모시고 일했던 분들입니다. 또 통일부 오시기 그 전에도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연구자로서 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한대로 남남갈등해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남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 내가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많이 얘기하듯이, 적대와 대결에 상대방인지 아니면 화해 협력의 동반자인지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두 차례 세미나에서도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듣고자 합니다. 김연철 장관님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장관

예, 여러가지 대북정책을 평가할때도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보, 보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대결과 협력 다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만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는, 북한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북한을 보았을 때 진보, 보수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통제의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변화 불변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나갈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구요. 대북정책을 수정할 때에도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것인가를 많이 던집니다. 저는 신뢰를 전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믿을 수 없는 국가이지만 그 불신을 어떻게 신뢰로 전환해갈것인가가 대북정책이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용표 장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이라는 측면도 있고, 통일을 함께할 동포라는 면도 존재합니다. 이중성과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느 쪽을 더 중시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에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 차이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실제 정책방향이나 결과로 보면 연속성의 측면이 큽니다. 다만, 북한의 다양한 측면들, 동포의 측면, 적의 측면을 쿨하게 인정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더 논의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되는데,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두가지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국가를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때, 이러한 정체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 갈등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연 원장님: 네, 저도 답은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에게 설문 조사 보면은 북한은 적대 대상인가, 대화 협력 대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초등학교 질문 같아요. 정책을 하거나 실제 북한은 단면적이 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게 두는 것이 문제 꼬이는 출발점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를 보면은 북한 그 바람직한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화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대적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주체가 누군가, 북한 정권인가 혹은 북한주민인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다면적인 측면의 강조성이 좀 달라졌을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인정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김범수 교수: 아예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어떻게 받아 볼 것인가 적으로 볼 것인가 적대 대상 대결 대상으로 볼 것인가 또는 협력대상 볼 것인가 이런 그 논의들이 한국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북한을 적 아니면 친구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양분 일단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해 주신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컨센서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측면을 같이 보고 그래서 경계 대상이면서 그리고 적대 대상이면서 동시에 또 협력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대북정책의 출발점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더 현실에서 경험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북한을 한쪽만을 강조해서 적대의 측면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왜 적과 대화를 하느냐, 왜 적과 협력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이렇게 친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북한을 좀 약간 이렇게 경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왜 또 적대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우리 홍영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양면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고려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여론이 그렇게 극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남갈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컨센서스를 세워 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해성 차관: 예 사실 토론의 초입인데,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서 벌써 토론의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대게 우리가 공감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초반부터 정답을 주셔 가지고… 사실 전에 이제 두차례 토론을 하면서 위원님 하고 같이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게 그래도 좀 보수적인 젊은 층들, 진보적인 젊은 층들 등등 해서 얘기를 헸는데, 뭐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얘기를 하다 보면 입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이를 줄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넓히는 것이 오늘 의미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갈등이라고 하면,

보수 진보, 계층 갈등, 최근 들어서는 일단 젠더 같은 얘기도 많고 이제 세대간 갈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일간지에서 여론조사 해 보면 남북관계나 대북정책 관련해서 2030세대와 예를 들자면 20대 40대 비교해 보면 통일의 필요성, 백신지원에 관해 의미 있는 차이가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평화 공존만 하면 되는 거 아닌지, 젊은 친구들은 이웃 이상의 인식이 별로 없는, 그게 자연스러운 수도 있는데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교수님 먼저 얘기해주십시오.

김범수 교수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 여론조사를 보면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가 수치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대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약간 40%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40대 50대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25% 정도 이런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한 25% 정도 지난 몇 년 동안 상승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의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은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은 뭐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는 인식들이 젊은 세대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통일의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식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통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든가 평화공존 등을 통해서 잘 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MZ 세대에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 문제로 보기보다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것들의 배경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은 젊은 세대들의 의견들을 잘 수용하면서도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연 원장님: 저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급진 통일론자에게 묻는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칼럼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제가 그 통일을 반대한다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지상 명제인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려 스러운 것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국내 정치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분들 중에 다수가 좀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정보가 너무 통일한 앞서다 보니까 우리 보수는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옛날 보수는 급진 통일을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통일을 실질적이게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현재세대가 이제 그 평화공존 통일보다는 이웃처럼 잘 살자 이런 쪽에 선호도로 파악해야 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게 과연 우리 뜻대로 될까라는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에 남자 해서 계속 남을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평화공존해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두 번째는 급진 통일은 굉장한 cost를 유발합니다. 비용이 커요. 그래서 아마 그 비용의 대부분의 부담이 노동시장의 사람들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겠죠. 근데 그런 식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비핵화가 진전되고 경협을 하면서 남북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 통일이 되면 cost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동력의 핵심이 될 분들이 바로 지금 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 되어서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risk. 또 주변 열강국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분단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챌린지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의 인적 자본 수준은 북한 주민과 경쟁 상대가 안 돼요. 남한의 인적 자본은 북한 가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자산이지 북한주민과 경쟁에서 잃어 버릴 수 있는 그런게 아니에요. 그런 거기 통합이 되면 오히려 남한 젊은 분들이 북한 가서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가 열리거든요. 따라서북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용표 장관 (00:28:16~)

MZ세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념적 잣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지금 현재 북한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저것은 이해가 안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 자체로 보니까 저런 북한에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해? 이런 면으로 보니까 평화공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아주 관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세대들보다 민족적 의식이 부족하지만, 같은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민족적 측면을 부각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 측면이 강조되는 MZ세대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통일이 그들의 삶에 어떤 직접적 영향이 있을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도 있을 것 같구요. 동시에 민족적인 측면들도 같이 이야기하여, 관심도도 늘어가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철 장관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말씀해주신 부분들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중시하고,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대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경쟁적 체제에서 교육을 받았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고성장시대에 살았다면, 지금은 아주 저성장시 대에 살면서 취업, 집 문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 같은 것들이 남북 인식, 백신협력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으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거죠. 적극적으로 통일하는 것 보다는 아주 장기적이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게 다가오지 못하다 보니까 저것이 나의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을 줄 것이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설명을 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점진 단계적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점진 단계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기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일,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해성 차관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세대보다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정치의 당국자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좀 걱정인데라고 하는. 그리고 그게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내지는 높여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 보면 어떻게보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현상이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그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 대로 인정을 하되 또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원장님도 이제 도전적으로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걸 너무 이렇게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부분, 김연철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교든 사회든 좀 더 잘 설명을 해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가 어떤 남북관계 현안이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남남갈등 해소라는 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2-30여년간 어쨌든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북한 핵문제의 해결입니다. 오늘 뭐 그렇게 북핵해법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핵 문제가 워낙 중요한 큰 문제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보를 나눌 건 아닙니다만 핵 문제가 해결 가능하냐, 북한이 생존 해결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핵 포기를 안 할거다부터, 아니다 이것도 충분히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또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남남갈등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 이 문제로 인한 어떤 남남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연철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철 장관

지금 북핵 상황을 보면, 낙관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30년되었고, 북한의 핵물질, 무기, 운반 상황을 보았을 때, 금방해결하긴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핵문제와 무관하게 평화, 남북관계에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국제 제재가 작동하고있고, 남북 교류협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논의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이 30년된 문제를 하루 아침에 해결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협상의 목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용표 장관

기본적인 인식은 비슷합니다. 힘든 협상이고,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핵문제를 놓고 벌이는 논의에서 민족과 관련된 논의는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우리에게 사용하겠어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국가이익을 놓고, 우리가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놓고 협상전략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는 생존을 놓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협상이고, 압박과 대화를 전략적으로 상요하여 협상전략을 잘 짜갈 때, 조금씩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것인가 저는 그 절대 독재자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없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독자적이게 하려면은 유연하게 사고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절대 핵포기 안할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매우 어려운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아니지않습니까. 전자를 보면 매우 고집스러운 것이고, 후자를 보면 매우 단순소박한 견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선 경협 후 비핵화 이것은 가짜 진보라고 생각됩니다. 경협해서 제재를 풀고 하면은 북한이 다르지않을까 하는 기대는 저는 빨리 접자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 북한의 핵 포기 안 할 거니까 북한 붕괴 시키자 하는 것도 빨리 물리쳐야 할 사고같습니다. 우리가 햇볕정책이후에 보수 정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engagement를 했어야 되었는데, 북한 내부를 변화시켜서 비핵화의 cost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북한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다년간의 돌고 도는 게임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좀 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해야 하는데 낙관적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문제를 아까 그 돌아와서 단기중기장기로 묻는 문제 같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제재를 강하게 해야지 협상의 걸린다 하고 말을 하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냐하고 묻는거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응급실 의사처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교수님들은 응급실에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한의사 처방을 낼 수 있잖아요. 저 단기중기장기 시각에서 현재로서 저는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으로 불러야 되는데, 단 하나 제가 김 장관이 말씀하신데 덧붙이자면 우리가 협상의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도무지 안 풀린다, 그래서 단계적 하면서 북한에게 적절한 제재완화라던지 북한 경제 개발 약속 이라든지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에 관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는 매우 전문적인 그 전문성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전문성까지 깊이 들여다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디테일을 매우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걱정은 조금 됩니다.

김범수교수

예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 하고 저도 사실은 뭐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비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약간의 관점 차이는 좀 느껴지는 거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연철 장관님께서는 중립 얘기하셨던 것이 가장 좀 저에게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홍 장관님도 계속 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비핵화와 경협 가운데서 경협을 먼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섣부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핵화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이 쉽게 비핵화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비핵화를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마지막까지 비핵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과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관계 교류협력에 입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출구의 단계에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김현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입구로 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구의 단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구의 단계에 있기까지 그 과정에서 제재와 중립, 핵확산금지, 현단계 동결들을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앞에 말씀하신 것과 일맥 상통합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 긍정적 기대, 비관적 실망보다는 현실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갖추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북한과 협상도 불가하고 모든 협력도 불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회의 상당부분 많은 분들이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극단적인 또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협력하고 교류협력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서 그러한 양극단의 견해를 피하고 저희가 중간적인 견해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해성 차관

감사합니다. 앞선 두 차례에 세미나 토의 과정과 그래도 오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해법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고려할만한 공부가 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거 같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여러 이견이 있으실 거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수정부때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고 진보적인 정부때 원칙적 입장도 가미하는 운용, 전략에 강한 입장에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 되어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다보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좀 에너지를 많이 좀 소진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 들어 보면 실제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얘기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새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갈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가장 뭐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면서 이거 혹시 어떤 남남갈등의 이제 소재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한미동맹을 최우선 그걸 또 강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균형이 필요하다 강조되다 보니까 그 사안 자체가 이제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김범식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범수 교수

아주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소위 보수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은 친미라고, 한미동맹을 좀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지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친중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우리 사회의 알려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할수도 있을 수 입니다만, 사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약 70년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학에서는 항상 패스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이 선행 원인이 없던 것이 아니라 70년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과거를 무시하고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 좌표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있는 수준에서 디폴트값으로 두고 이 디폴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은 지금 현재의 한미동맹 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어떻게 하면 정확한 0에서 중국 쪽으로 더 기우는 것은 아니고, 이미 상당부분 미국 쪽으로 가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거기서 조금 현재 상태를 스탠스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밸런스를 조정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와 비교했을때 중국과 저희들이 경제 교역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교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과 적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들을 최대한 많이 모색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한 1년 반 전이 었던 거 같은데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서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오셨던 연구원 분이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는 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미국 쪽으로가 있는 상태에서 줄다리기 내지는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줄타기를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 같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또 뒤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과제인 거 같습니다.

천해성 차관

김범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택을 강요받는 저희와 같은 당국자들이 매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병연 원장님

아마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경제적인 효율성 두 번째는 북한문제 같아요. 저도 북핵 문제를 풀고 하려면 중국의 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해야할텐데 줄을 타는 게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줄을 타는 실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원래 편 들자 이렇게 말하고 둘 다요,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가 더 좁아지거든요. 중국도 선택을 강조하고 미국도 선택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외교의 원칙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세 가지를 만들자, 동맹의 원칙이라던지 원칙을 만들어서 우리의 입장을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너무 우리가 와이드 오픈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줄을 탄다면 특히 지금 같은 갈등의 시기가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우리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좀 더 잘 설명하는 원칙을 만들자. 우리 그 지식인들이 나 관료도 전문가들이 우리가 누군가, 외교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서 이런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표 장관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는 강대국 사이의 약소국으로 이런 입장에 어쩔 수없이 처해왔고, 그래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이것이 이분화, 이념화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 중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영역을 넓혀 가기 위한 지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미. 중관계에서 전략을 짤 때, 균형, 등거리, 중립 이런 이야기는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관계를 정의하기보다는 이슈별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으로 가기보다는, 선택하는 척을 해서 까지를 포함하여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철 장관

미. 중 전략 경쟁이라는 것이 거대한 질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쟁위주로 전개되고 있고, 점점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고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자 택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사안별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인 것 같습니다. 국익을 원칙으로 두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아가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딫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나아가는 유연성, 실용주의 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관계에서 특히 군사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비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라진 환경을 전제로해서 기존의 남북관계, 북핵 해법등의 여러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짜야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보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업을 불러서 규제하고 원래와 시장경제 원칙과 비교했을 때 낯선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업 정책이라던지, 정부 기업간 관계라던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해성 차관

예 감사합니다. 두분 장관이 말씀하시면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강조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질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요, 그리고 각자 의견 개진이 끝난 다음에 그런 저의 질문과 상관없이 오늘 이런 모임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계속 얘기해 주제이기도 한 남남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도, 아까 토론 과정에서도 조금 실제보다 많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게 정치적인 이유던 또는 일부 언론이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주셨지만, 그러나 역시 현실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남남갈등 문제 자체도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학계에서 있었던 문재인 거 같습니다. 이제 마침 몇 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 현정 질서에서 같은 여당내에서 바뀌게 되면은 정권이 재창출 됐다. 또 여야가 바뀌면 정권교체 했다,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권재창출은 없다 같은 여당 내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정권 교체다 라고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정책에 있어 지속가능성… 남남갈등해소, 대북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진폭이 큰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남 갈등해소방안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마지막으로 장관님부터 해서 한 번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철 장관

남남갈등해소 국민적합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만 봤을 때, 평화적 통일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문화나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진보-보수간의 갈등은 이념적 차원에서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을 정책의 영역으로 끌고온다면 정책은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정책은 주어진 환경속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책을 두고 과도한 국내정치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공감대를 놓을 수 있으려면 정책 중심으로 토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용표 장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북정책에 대해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책을 보면 매우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지속성도 많고요. 결국은 이중성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면 언론에서 차별성에 확대를 두어 정권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지속가능성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정책분야, 특히 대북 정책 분야는 정치적인 면과 많이 얽혀 들어가거든요.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성과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점에서 정무적인 관여를 줄이고, 외교 안보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연 원장님

저는 이제 우리 남남갈등 그럴 때에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복지문제거든요. 북한 문제는 진보냐 보수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는 과장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문제를 북한 주민까지 포함하여 좀 넓은 시야에서 포용력으로 이편 저편 따지지 않고… 근데 아마 대통령 하시는 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 쪽은 전문가가 많잖아요. 근데 북한 문제는 자기 것, 가장 강한 자기 브랜드를 내고 싶은 것 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 마시라고,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establish해야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가 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북한 문제도 전문성을 중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교수

저도 앞서 말씀하시는 분들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관성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막 확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입장에 다르거나 이제 지지자들 분들의 또 목소리를 담아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정부분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화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관계 기본법 이라던지 오랜 시간 동안 입법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아주 원론적인 법으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와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많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도화를 해 놓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 국제 정치 상황 변환에 따라서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 전환을, 같은 정부 아래서도 사실은 정책전환을 할 필요성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했습니다만,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제도화라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내부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런 합의 도출하는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해성 차관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남남갈등해소 남남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간략하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기전에 남남갈등, 정책 지속성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정치와 관련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정병국 의원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그래요, 저는 오늘 전직 통일부 장관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론적으로 또 문제는 정치다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정권이 바뀌고, 통일부 장관이 오실 때, 과거의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었을때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보수, 진보 정권에서 우리 대북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북한은 초지일관이다. 북한은 핵문제만 보더라도 계속 개발을 해왔고, 정권 자체가 3대 세습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보수 정권때는 압박을 써보기도했고, 진보에서는 개화도 해보았지만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판을 짜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공감은 많이 하면서 결국은 그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김연철 장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야말로 그 87년체제 출범한 이래로 34년이 흘렀는데 과연 5년단임제 대통령제가 특히 이런 외교 안보 통일에 문제 있어서 유효한 정책이냐, 저는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정부에서 그 국무위원으로 일을 해 봤는데 어느 부처던 정책의 지속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권이 재창출 되어도 정권 재창출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5년단임제 내에 자기 색깔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이 지속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한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는 저는 2번 우리 그 세대 간의 인식 문제를 다루었던 토론이나 오늘 두 전직 장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들이지만 이제 이 6공화국 체제가 이제 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정말 그 이제 개헌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특히 통일 문제 있어서 요즘에는 통일부에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얘기들 해요. 제가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세대 간의 대화를 하면서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냥 일반적인 조금 불편한 이웃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런데 굳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 했을 때에 과연 통일부가 존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갖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일부가 존속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존속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통일부 장관들을 주기적으로 모여 토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토론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해성 차관

예 의원님께서 중심 정치인 답게 정치적인 해법을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 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을 한번 바꿔 보자 라는 큰 말씀을 주셨고요, 개헌 필요성까지도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연철 장관

저는 대체로 대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도하게 합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 보수 안에 굉장히 다양하고, 세대나 현안에 대한 입장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통점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인식의 경향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미래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과도하게 생각을 주입하기 보다는 많이 들어야겠다, 세대적인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그 세대가 공동체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용표 장관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회를 늘려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도도 바뀌고, 정치적 리더십도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고, 시작은 저희가 대화를 자주하고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연 원장님

저도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딱 대통령 분들은 얼마나 소통을 잘 하셨을까, 저는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과연 북한 문제에서 잘 되었던가. 제가 그동안 3번 대통령을 만나는데 자리에서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잔뜩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따라서 결정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골고루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범수 교수 (00:18:30~):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대부분적으로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만 생각보다 두분 장관님들도 정말 거의 비슷한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 놀랐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보면 생각보다 공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여론 시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목소리는 아마도 그런 토론에서는 너무나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학계라던지 좀 더 이렇게 많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여론 시장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생각보다 사실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표출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또 극단에 치우친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 정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합의될 수 있거나 아니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이해하고 용인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해성 차관

예, 오늘 정말 긴 시간동안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남남갈등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긴 합니다만, 하면서 역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식의 소통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참여자를 확대해서 이런 기회를 계속 마련하고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남남갈등해소,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